동서남북

청와대 출신으로 짜여진 MB 정부 3기 경제팀

강 경 희
경제부 차장

지난 5·6 개각(改閣)으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60개월 가운데 근 3분의 2가 지나갔고, 3분의 1가량이 남은 시기다. 이 시점에 3기 경제팀으로 등장하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는 '박재완 정무수석-김중수 경제수석'으로 불렸던 인물들이다.

3년 전 데자뷔(기시감·既視感)의 인물들로 구성된 새 경제팀을 보니, 3년 전 경제 공약의 기억도 덩달아 떠오른다. 당시 MB 정부는 보잉 747 여객기보다 요란한 '747 경제공약'을 내걸고 등장했다. '연 7% 성장으로 5년 이내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10년 내에 4만달러 소득을 달성하고 세계 7위 경제를 이룩하겠다'는 공약이었다. 당시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 여건에 비해 지나치게 장밋빛이어서 "공약(公約)이 아니고 공약(空約)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MB맨들의 신념은 넘쳤다.

하지만 '747 공약'은 시동도 걸기 전에 곤두박질 쳤다. 광우병 사태로 취임 첫해의 몇달간을 허송세월로 보냈고, 겨우 중심을 잡을 즈음엔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경제가 고꾸라졌다. 선진국에 비하면 글로벌 위기에 상당히 선방(善防)했다지만, 그 여파로 지난 3년간 우리 경제 성적표는 정말이지 '747 공약'과는 거리가 멀어져 있다. 매년 7% 성장은커녕 2008년(2.3%), 2009년(0.3%), 2010년(6.2%) 3년간의 성장률 합계가 7%를 넘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는커녕, 2만달러 밑으로 도로 내려갔다가 지난해 간신히 2만달러를 회복했다. 몇 년 전 세계 11위였던 경제규모 순위는 2010년 세계 15위까지 내려가 있다.

사실 1기 강만수 경제팀, 2기 윤증현 경제팀은 재임기간의 상당 부분 동안 위기를 수습하느라 고군분투했다. 글로벌 위기의 파고(波高)에서 이제야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왔고, 따라서 3기 경제팀이 내는 성과로 MB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기록될 수밖에 없다. 그새 시간이 많이 흘러 대통령 임기는 중반을 한참 넘어섰고,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새 판을 짜느라 분주하다.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 황우여 신임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명박 정부의 간판 정책 중 하나인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타를 날릴 정도로, 정치권에는 표심(票心)을 겨냥한 온갖 경제 처방이 난무한다.

지금은 대통령 측근들조차 누구도 입 밖에 꺼내지 않고 잊힌 단어가 된 '747 공약'을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무리해서라도 그 공약을 달성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3년 전 공약집에는 '747'만 있는 게 아니다. '공교육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국가 책임하에 영유아 보육·교육 실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살리기' '서민 주요 생활비 30% 절감' 처럼 국민들의 생활을 좀 더 낫게 하겠다는 열정을 담은 공약들이 들어 있었다. '747 공약'의 날개 위에 얹혀 등장했던 인물들이 경제팀 수장으로 나선 만큼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 입성(入城)했을 때의 초심(初心)을 되짚어보고 추진할 것은 계속 추진하면서 경제정책의 무게 중심을 잡아달라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도 정치인의 공약(公約)이란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번지르르하게 분칠하는 공약(空約)에 불과하다는 국민의 불신만 더 굳혀놓고 말 것이다.

khkang@chosun.com

기고

배아줄기세포 연구,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해야

김 선 영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을 허가했다. 이번 임상시험의 대상 질환은 ABCR 유전자에 선천적으로 고장이 있어서 망막 부위에 독성물질이 쌓이면서 시력을 잃는 스타가르트 질환이다. 이번에 사용될 세포는 불임시술을 위해 사용했던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만든 후에 이를 망막세포로 분화시켜 만든 것이다. 따라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번에 사용될 세포는 배아줄기세포가 아니라 이를 분화시킨 성숙한 세포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실시하는 임상시험으로 보도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허가된 경우이다. 앞선 세 개 임상시험은 모두 미국에서 허가받았다. 첫 번째는 제론사의 척수손상 환자 치료 임상시험, 두 번째는 ACT사의 스타가르트병에 대한 임상시험, 세 번째는 ACT사의 노인 황반변성 임상시험이다. 미국의 독주 속에서 국가로서는 두 번째로 임상을 허가했으니, 우리나라가 배아줄기세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스타가르트 질환의 선택은 과학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매우 탁월한 결정이다. 면역거부 가능성이 낮은 기관인 눈을 타깃으로 사용하고 있고, 대체치료법이 없으며, 배아줄기세포에서 망막세포로의 분화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눈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세포를 전달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쉽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아줄기세포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아직도 멀다. 이번 임상시험에 사용될 핵심기술은 거의 모두 미국 회사에서 개발됐다. 배아줄기세포 자체는 물론 망막세포로 분화할 때 필요한 기술 모두가 ACT사에서 만들어진 것이니, 이번 임상시험은 우리 기업이 미국 기술을 복사할 수 있다는 것과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으로 보일 수 있다.

실제 배아줄기세포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아쉬운 점이 많다. 배아줄기세포 분야는 한 개의 세포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복잡한 존재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매우 좋은 시스템으로서 노벨상이 몇 개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분야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배아줄기세포 하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난치병·불치병 치료제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찌 보면 배아줄기세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 세포를 불치병에 대한 중요한 대안으로 보는 일반적 시각이다. 하나의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은 물론 안전성을 증명해야 한다. 질환에 따라 희귀의약품으로 선정되면 이 기간을 조금은 단축시킬 수 있지만, 여전히 정부로부터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가 배아줄기세포 선진국으로 가려면 원천특허가 나올 수 있는 분야, 특히 세포 분화에 대한 집중연구가 필요하다. 배아줄기세포는 제한된 기관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수 연구자들이 이 세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역량을 총집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래도 부족하다면 이번 경우와 같이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들여오고, 이를 반복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더 나은 방법을 개발하거나 다른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우리같이 인적·물적 자원이 제한된 나라에서는 이러한 개방전략만이 배아줄기세포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대통령이 정치를 卑下하고 멀리하면

황우여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새 지도부가 이명박 정부의 기조와 다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소장파들은 친(親)박근혜 전 대표계의 후원을 받아 친이(親李)계를 누르고 자기들의 의도대로 새 원내지도부를 뽑은 여세를 몰아 두 달 뒤 전당대회에서 자신들이 당 대표를 맡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 소용돌이에 휘말려 친이계는 이리저리 쪼개져 그중 일부는 박 전 대표 쪽으로 넘어가는 이른바 월박(越朴)현상이 한창이다.

임기 말 권력누수는 모든 정권이 겪는 공통된 권력 노화(老化)현상이다. 집권 마지막 해에 이르면 여당의원들조차 인기와 권력이 함께 떨어져 가는 단임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과장된 제스처를 들고 나오는 것이 이 나라 정치의 일반적 행태였다. 그렇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1년 9개월이나 남아 있는 시점에 여당 안 권력이 비주류로 넘어가 버린 경우는 없었다.

이 대통령은 집권기간 내내 여의도식(式) 정치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정치와 거리를 두고 비하(卑下)하는 발언을 계속해왔다. 그 전략이 잠시 동안 대통령 인기를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됐을지 모르나 이후 국정 운영에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의 협력을 얻는 데도 결정적인 걸림돌이 됐다.

이 대통령은 반대파들과 대화하고 타협하지 않더라도 쌓여가는 정권의 업적이 언젠가는 민심과 반대 세력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듯하다. 이런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은 번번이 야당의 반발을 키웠고 세종시, 4대강, 동남권 신공항 등 중요 현안에 맞닥뜨려서 집권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방해가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초부터 청와대가 당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으니 당도 자신의 국정운영에 끼어들지 말라는 태도를 취했다. 그런 정치방식은 그의 정치철학을 받들어 태어난 열린우리당이 내부 반란으로 자신의 임기 후반에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렸다.

대통령중심제 국정운영의 성공 여부는 3권분립 원칙에 의거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권력을 어떻게 설득해 협력을 얻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대통령이 대통령중심제의 이런 핵심 작동(作動)원리를 외면하고 성과와 효율에만 매달려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 자체를 불필요하다거나 거추장스럽게 여기면 대통령이 추구하는 핵심과제는 번번이 좌절될 수밖에 없고 민심도 흩어지고 만다. 이 대통령은 이제부터라도 달라진 오늘의 정치현실 앞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자세를 재정립하고 새롭게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다음 대통령이 되려는 포부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도 이번 사례에서 앞날의 교훈을 찾을 일이다.

금융인은 쏙 빼버린 금융감독혁신팀

정부는 9일 금융감독원의 구멍 뚫린 감시 기능을 재구축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13명의 민·관 금융감독혁신팀 위원 중 관료 출신이 6명이고, 나머지 7명은 대학교수 또는 연구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다. 정작 금융감독의 대상으로 금융계 현실을 매일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는 금융인은 1명도 없다.

6명의 관료 출신 중에서도 공동 팀장인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과 안양호 행정안전부 2차관을 제외한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추경호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등 4명은 줄곧 한솥밥을 먹던 재정부 출신이다. 이 중에는 저축은행에 대한 정책 결정에 참여해 간접적으로나마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도 있다. 과연 이들이 한 식구처럼 지내왔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동료들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깨버릴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7명의 교수 출신들이 금융 감독의 새로운 이론적 틀과 다른 나라의 조류(潮流)를 제시할 수는 있겠으나, 현장에서 감독기관과 피감(被監)회사 간에 어떤 끈끈한 유착관계가 형성되는지 알 턱이 없다. 이번 저축은행 사건에서도 금융감독원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해 금융회사 쪽으로부터 '교육'을 받아가며 검사하는 일이 잦았고, 그 바람에 저축은행 비리를 사전에 적발할 수 없었다고 한다. 용케 적발했더라도 뇌물을 받고서 덮어준 사례가 속속 나왔다. 저축은행은 금감원의 퇴직 간부를 감사로 보내달라고 간청하고, 그들을 금감원을 상대로 하는 로비스트로 활용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이런 은밀한 거래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금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혁신안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위의 정책 결정기관으로서 이번에 금감원과 함께 개혁 대상으로 논의되어야 할 조직이다. 금융위원회의 김석동 위원장은 혁신팀이 발족한 당일 "금융감독권을 아무에게나 줄 수 없다"고 미리 선을 긋고 나왔다. 그는 금융회사의 상임 감사를 없애고 비상근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비상근 감사위원회가 상임 감사보다 더 효율적인 감시 장치라는 근거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개혁 대상 조직이 가이드라인을 먼저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국민은 앞으로 나올 금융감독 혁신안의 한계를 벌써 느끼기 시작했을 것이다.

한국현대사학회, 대한민국 참 역사像을 보여주라

한국 현대사 연구의 잘못을 바로잡고 한국사를 세계사와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현대사학회가 발족한다고 한다. 20일 창립대회를 하는 이 학회의 주축은 좌파의 반(反)대한민국·친(親)북한 사관(史觀)을 비판해온 인문·사회과학자들이다. 학회 창립준비위원·고문 35명 중 한국사 전공자는 3명뿐이다. 학회는 "엄정한 객관성과 공정성으로 대한민국의 발전과정과 북한현대사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표류하는 근·현대사 교육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자취를 제대로 연구하자는 학술 모임에 마땅히 중심이 돼야 할 국사학계 자리가 비어 있는 모습이 우리 현대사 연구의 파행적 현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한국 근·현대사가 국사학자들의 전유물(專有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국사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자리라면 그 중심에 국사학계가 있어야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도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많은 현대사 전공 국사학자들이 한국 현대사를 자기들만의 것인 양 여기고 편향된 사관으로 사실을 취사선택해 자라나는 세대에게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불신(不信)을 심어왔기 때문이다.

국사학계의 한국 근·현대사 연구가 지난 수십년 동안 '반(反)외세' '민중' '내재적 발전론'의 틀에 얽매여 있는 사이 인접 인문·사회과학에선 한말과 일제시대, 대한민국사 연구의 새로운 성과들을 쌓아왔다. 한국현대사학회는 이런 성과들을 토대로 대한민국 국민의 참 역사상(像)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세계의 흐름과 단절된 고도(孤島)의 역사가 아니다. 개항 이후 40년 국권을 잃어가는 과정이나 건국 후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적응하며 발전해 가는 과정은 한국과 세계가 어떤 상호 접촉과 변화를 거쳤는지 모르면 알 수가 없는 역사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한 나라 역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세계와의 여러 작용의 결과라는 인식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한국현대사학회는 한국적 관점에서 세계사를 이해하고 세계적 관점에서 한국사를 이해함으로써 변화하는 세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